

‘국회 정상화’ 직전 판 앞은 한국당

여야 3당 의사일정 합의에도
의원총회서 추인 거부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반발
‘선별 상임위’ 기존 입장 고수

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 이로써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당은 전날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제경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정문화와 북한 폭탄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척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조7천억원



이낙연 총리 추경 시정연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28일 시작하기로 했고 국회 정상화의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토론회 시점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6월) 임시국회 안에 하는 것”이라며 “다만 추경 전에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 처리 과정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5·18 진상조사위 구성이 급물살을 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 등이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은 군 경력자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5·18 특별법 개정안을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조사위원을 추천한다면 5·18 진상조사위 구성이 다음 달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치원 3법’ 법사위 자동 회부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24일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뒤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조승래 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된 뒤에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 당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을 심사하지 못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청년민주당, 황교안 고발

“스펙 부족한 아들 취업 특혜” 오늘 고발장 제출

아들이 스펙이 부족한데도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발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민주당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 인사 특혜, 군대 특혜까지 황교안 군 경력자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5·18 특별법 개정안을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조사위원을 추천한다면 5·18 진상조사위 구성이 다음 달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청년민주당은 ‘아들 스펙 발인’으로 황 대표 스스로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숙명여대 특강에서 황 대표가 스펙도 없는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얘기를

하며 희망을 가지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황교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스펙이 없어도 입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 아들은 KT에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으나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인사 1년 만에 법무팀으로 인사이동했다”며 “군대에서도 이례적인 보직 변경으로 쉬운 보직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황 대표가 속한 한국당에서는 여러 의원이 채용 비리 문제가 밝혀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징계는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민주당-민주노총, 관계 개선 ‘먹구름’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투쟁 예고 ... 면담계획 보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 시위 지지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개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당장,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민주노총 집행부와 면담 계획도 상당 기간 보류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노동탄압 정부’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권으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문제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 함께 풀 노동 현안이 쌓인 만큼 민주노총과의 관계 회복은 해결해야 할 숙제지만 이 같은 악재에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을 둘러싼 속사정도 복잡하다. 김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논평 없이 침묵했지만 내부에서는 당위론과 회의론이 교차했다.

당 내외에서는 앞으로 민주노총과의 관

계와 관련, 불법에는 분명히 선을 그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더라도 대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김 위원장 구속과 관련한 글이 서른 건 넘게 올라왔다. ‘구속이 정당하다’, ‘민주노총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단호한 입장 정리를 주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 당원은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만났으나 (사회적대화기구 참여에 대한)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불법 폭력 집회는 용서할 수 없다”고 썼다. 또 다른 당원은 “민주노총은 지도부가 혜택이란 혜택을 다 받으면서 가족 특혜 취업에, 대모나 일삼고 노사정이 모여 대화로 해결하자는 요구를 거부하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 원내대표가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했다면 당이랑 청와대는 신나게 공격 받았을 것”이라고 두둔하는 글도 올라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1심 무죄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

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차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질량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전원주택전경

장밋 풍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흰이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